

利益集團과 政治發展：全勞協의 경우

吉 昇 欽

| <目 次> | |
|-----------------|------------------|
| 1. 序 論 | 成 |
| 2. 韓國勞動組合 總聯盟史 | 4. 全國勞動組合協議會의 未來 |
| 3. 全國勞動組合協議會의 結 | 5. 結 論 |

1. 序 論

한국정치의 民主化는 또한 利益集團을 가지고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익집단이라면 이익집단으로서의 「3者」라고 할 수 있는 經濟人團體, 勞動者團體, 農民團體가 있고, 以外에도 종교단체, 학술단체, 지역단체 등 가지가지의 사회경제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고는 한국의 노동자단체만을 가지고 한국정치의 民主化를 다루기로 한다.

1990년 현재 한국의 노동자단체라면 勞總(韓國勞動組合總聯盟)과 全勞協(全國勞動組合協議會)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는 과거사때문에 종종 「御用勞組」로 취급되고 후자는 87년의 「6·29宣言」 이후 「노조의 民主化」라는 기치하에 조직·출현한 전국노조단체이므로 「民主勞組」로 취급되고 있다.¹⁾ 본고는 한국정치의 民主化라는 측면에서 볼 때

1) 정부는 全勞協을 現行法上 연합단체로 인정될 수 없는 「非合法團體」로 간주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노동자의식조사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韓國勞總 이외의 전국적 노조단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81.3%에 이른다는 것이다. 産業平和特別對策班, 『急進勞動勢力의

전노협은 노총에 비하여 進一步한 노조단체이지만 制限性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기로 한다. 이 주장은 최근 한국노조의 民主化 가능성을 부정하는 權威的國家組合主義理論²⁾ 또는 新植民地國家獨占資本主義理論과³⁾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重要性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본고는 모두 5節로 구성되어 있다. 제 2 절은 한국의 勞總史를 다루고, 제 3 절은 全勞協을 다루고, 제 4 절은 全勞協의 미래를 전망하고, 마지막으로 제 5 절은 본고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2. 韓國勞動組合總聯盟史

한국에서 1990년 1월 22일 全勞協이 결성될 때까지 전국노조단체는 大韓勞總(1946~61) 또는 韓國勞總(1961~90) 「하나」뿐이었다. 물론 해

實體와 對應論理』(인쇄소 및 발행 연월일이 表記되어 있지 않으나, 주간전국 노동자신문 90년 1월 26일에 의하면, 이 책자는 90년 1월 20일 靑瓦臺에서 盧泰愚大統領의 주제로 「산업평화조기정착과 임금안정을 위한 대책회의」 후 결성된 「산업평화 특별대책반」이 마련한 것이라고 함), p.26; 초의수, 「전노협건설과 조직활동에 대한 노동자의식 연구」, 지역사회문제 자료연구실, 『지역과 노동』(서울: 친구, 1990), p.201.

- 2) Jang-Jip Choi, *Interest Conflict and Political Control in South Korea: A Study of the Labor Union in Manufacturing Industries, 1961~1980*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1983); 崔章集,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서울: 열음사, 1988).
- 3) 이러한 주장은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이병철, “신식민지국가독점 자본주의의 이론적 구조”, <사회와 사상>, 1988년 10월호, pp.186~208, 특히 pp.203~208; 이병철, “발전도상국 사회구성체론의 현단계와 신식민지자본론”, <大學新聞>, 1989년 3월 13일; O. Darydoy(소련의 저명한 경제학자), “남조선의 자본주의적 근대화 정치적 발전의 제국면”, <국동의 제문제>(일역), 1988, 제 3호(國譯), <현상과 과학>, 1988, No.2, pp.279~296, 특히 p.288; S.S. 수슬리나(소련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주임연구원), <남한경제론>, 서울, 솔밭, 1989, p.12; C. Barone, “Dependency, Marxist Theory, and Salvaging the Idea of Capitalism in South Korea,”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Spring, 1983), pp.43~67, 특히 p.47; Hochul Sonn, *Towards a Synthetic Approach of Third World Political Economy: The Case of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87), pp.382~384.

방적후에는 1946년 3월 10일 결성된 대한노총과 이보다 먼저 1945년 11월 15일에 결성된 全評(朝鮮勞動組合全國評議會) 두 단체가 나란히 併存하고 있었으나, 全評은 강경좌파노선을 표방하다가 美占領當局에 의해 不法化된 바 있고, 또 1959년에는 大韓노총내의 파벌싸움으로 全國勞動協會議會가 分身設立되어 전국노조단체는 또다시 二元化되었으나 이 두 단체는 1960년 11월 다시 統合되었으나, 그 統合勞組는 61년의 5·16군사쿠데타로 政黨 등 기타 정치사회단체들과 함께 해산당하였다. 그러나 이 해산당한 전국노조단체는 61년 8월 韓國勞總(韓國勞動組合總聯盟)이라는 이름으로 재결성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⁴⁾

그런데 大韓노총·韓國노총에 의하여 지배되어 온 한국노조계의 지난 40여년간은 「勞動運動의 暗黒期」로 命名될 수 있다. 우선 해방직후의 노조운동사를 보면, 左派系統의 全評은 ①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② 민족반역자 및 친일파 일체의 기업을 공정위원회에서 보관하고 노동자의 관리권참가를 요구하는 사회주의적 요구, ③ 정치적 강령을 포함한 행동강령 등을 내걸고 노동운동을 전개하다가 미점령당국에 의해 不法化된 것이다.⁵⁾ 이로써 한국의 노동운동은 출범당시부터 右派勞組인 大韓勞總에 의해 주도되게 된 것이다. 거기에 대한 노총의 제 4대 위원장 錢鎭漢이 「全評타도의 공적을 인정받아」 1948년 제 1공화국 수립시 初代社會部長官으로 발탁되었는데도 노조의 중앙기관 위원장직을 겸임함으로써 노조를 정부에 예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⁶⁾ 노조최고위원이 自由黨中央委員에 선임됨으로써 대한노총을 자유당의 기간단체화하는 현상도 빚었다.⁷⁾ 그 후 제 2공화국시절에 와서 대한노총은 「노동조합의 정치적 中立化」를 시도도 하였으나 이러한 시도는 61년의 5·16 군사쿠데타로 短命으로 끝나 버린다.

4) 金旺植, 「韓國勞總의 動態와 特性」, 尹亨燮·申命順, 『韓國政治過程論』(서울: 法文社, 1988), pp. 224-226.

5) 위의 논문, p. 224.

6) 위의 논문, p. 225.

7) 위와 같음.

제 3 공화국을 거쳐 제 4~5 공화국 시절의 한국의 노조사는 더욱 더 위축되고 왜곡되어 갔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제정된 노동관계법은 ① 노조의 정치활동금지규정을 강화하여 노총의 정치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거의 배제하고, ② 또 노조의 결성에 있어서도 당국의 신고증을 받아야 결성을 가능하게 하는 「制限」을 두고, ③ 하나의 사업장 안에 하나의 노조만을 인정하는 등 정부가 인정하는 조합 以外の 노동조합의 결성을 금지시켰다.⁸⁾ 1971년에는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의 선포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행사는 사전에 主務行政當局의 조정을 받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완전히 制約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維新政治體制 成立 후 1973년에 제정된 노동관계법은 노조활동에 더 큰 제약을 加하였다는 것이다.⁹⁾

그리하여 한국노총의 운동기조는 노동조합주의 반공노동운동노선 경제주의 노사협조주의 합법주의 등에 국한되었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주의란 노총이 노동조합운동을 정부가 제한한 테두리 범위 내에서 기껏해야 정부에 대하여 건의나 하고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위한 청원에 머무는 일상적인 노동운동에 국한시켜 왔다는 것을 가리키고, 반공운동노선이란 남북대치상황을 과대 포장하여 노동운동을 하나의 반공우익운동으로 편제시키려는 것을 가리키고, 경제주의란 노총의 운동범위를 경제투쟁에 국한시키고 행어나 정치운동에까지 확대시킨다면 그것은 집권여당편중의 정치활동에 국한시켰다는 것을 가리키고, 노사협조주의란 정부나 자본가의 의사에 끌려다니는 노사협조를 가리키고, 마지막으로 합법주의란 노총이 法的 테두리 내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¹⁰⁾

이상의 결과 한국노조의 조직율은 10~17%라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게 되었고,¹¹⁾ 조직의 형태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實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전국노조단체인 노총이 산

8) 黃鍾性, 「國家와 組合主義統制」, 尹亨燮·申命順, 앞의 책, p. 483.

9) 위와 같음.

10) 한국사회연구소, 『노동조합조직연구』(서울: 백산서당, 1989), p. 314.

11) 黃鍾性, 앞의 논문, p. 483.

하노조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 것이다. 거기에 한국노총은 86년의 「4·13 護憲措置」마저 지지하는 태도표명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들은 한국에 소위 「國家組合主義」(state corporatism)가 강하게 作用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조합주의는 흔히 노동을 「無力化」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립단을 非活性化(deactivation)시키고 脫政治化(de-politicization)시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제 5 공화국말 시절까지의 한국노총사가 이와 같이 「暗黑期」를 걸어 온 것은 여러가지 要因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가지 要因만을 보이겠다. 첫째는 한국의 分斷史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國土의 分斷으로 인한 이념대립은 한국노조의 출범시부터 급진좌파의 全評을 不法化시키고 「反共」을 추구하는 大韓勞總단의 存在를 허용할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조정책은 6·25戰爭 이후 더욱 더 강화되어 갔다. 1961년 5·16 군사혁명을 주도한 집권세력들은 아예 「反共을 國是의 第一義」로 하겠다는 정책을 혁명공약 제 1호로 내걸기까지 하였다. 두번째는 한국의 歷代政權의 뿌리 깊은 保守主義이다. 우선 제 1 공화국정부는 1948년 수립당시부터 極右派의 李承晩勢力과 韓民黨系列 爲主로 구성되었고, 제 3~4 공화국정부도 朴正熙大統領의 사업이념에 따라 당시 경제력에 있어서 北韓에 크게 뒤지고 있는 南韓의 경제력을 키운다는 것에 최고의 順位를 주었던 것이다. 제 5 공화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全斗煥大統領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것을 크게 앞지르게 되자 이번에는 「先進祖國의 創造」라는 구호를 내걸고 한국경제력이 선진국수준에 이를 때까지 경제성장정책을 밀고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그 정책을 추진해 갔었던 것이다. 거기에 한국의 경제성장정책은 수출주도형의 정책이었다. 수출주도형이란 산업 노동자의 임금의 억제를 통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 간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상 제 5 공화국 시절까지의 한국노총사를 간략히 살펴보았거니와 제

6 공화국에 들어와서 한국노총사는 크게 바뀌어갔다. 그것은 87년 「6·29 宣言」이 제공한 새로운 정치환경 하에서 소위 「民主勞組」들이 우후죽순 식으로 出現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민주노조」들은 과거의 한국노총이 산하노조들을 「어용노조화」시켰다고 비판하면서 한국노총의 法的 權威를 거부하고 한국노총과는 별도로 民主的 전국노조단체가 結成되어야 한다는 뜻을 表明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한국노총 자체내에서 「改革」의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다. 노총의 전체임원은 88년 10월 24일 총사퇴를 결정하고, 11월 9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케 하여 개혁지향적인 朴鍾根氏(섬유노련위원장)를 노총위원장으로 당선시켰다. 신임 朴鍾根노총 위원장은 노총사무총국의 實務陳에 「在野勞動勢力」들도 영입하고, 개혁 정책을 추진해 갔다. 88년 12월 9일에는 「노동악법개정촉구 및 三星규탄 전국대표자궐기대회」를 연 바 있으며, 89년 2월 16일에는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勞動節을 3월 10일(大韓勞總 창립일)에서 세계적인 메이데이인 5월 1일로 바꾸기로 결의한 바 있으며, 89년 11월 5일에는 서울 보라매公園에서 노동법개정 및 경제민주화 촉구궐기대회(노총사상 최초의 屋外集會)를 개최한 바 있다.¹²⁾ 그러나 소위 「民主勞組」 세력들에게는 노총의 이상과 같은 「改革」만 가지고는 90年代, 더 나아가서는 21세기의 한국의 노조운동을 이끌어 가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들 民主勞組勢力들의 노총에 대한 비판내용을 소개하면, 다음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노총이 자기의 운영권을 개혁과의 朴鍾根 위원장에게 넘겨주고 또 「6·29宣言」 이후 나름대로의 民主化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노총비판세력들은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노총은 자기의 40여년사에 있어서 굳혀 온 「御用行脚」, 가깝게는 86년의 「4·13護憲」지지에 대한 자기반성이 없었으며, 6공화국에 들어와서도 지속되고 있는 정부와 자본가의 노조탄압에 대하여 「말」 이상의 뚜렷한 「行動」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노총의 조직 그 자체가 노

12) 전국주간노동자신문(1990년 2월 9일).

총을 保守指向化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노총은 조직상 路線이나 政策보다 人脈과 利權에 따라 움직이는 체제로 굳혀져 왔다는 것이다. 노총은 기본적으로 20개의 産業聯盟代表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代表者會議에서 정책 및 노선을 결정하는 集團指導體制를 채택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체제는 노총내에 파벌정치를 조장하고, 파벌안배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노총위원장 선거시 당선자는 집행부인사나 정책수립시 당시 파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1990년 2월 22일에 실시된 제14대 노총위원장선거에서 개혁지향의 朴鍾根 후보는 310票, 보수지향의 이시우 후보는 290票를 얻었는데,¹⁴⁾ 이 결과 당선된 개혁지향의 차위원장은 노총내의 보수지향세력들의 發言權을 떨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⁵⁾

마지막 세번째는 노총의 財力에 관한 것이다. 財力은 노총의 活動을 物的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노총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外國의 노조의 경우, 그들은 각자 풍부한 財力を 갖추고자 노력해 오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美國의 AFL-CIO의 경우, 또는 英國의 TUC의 경우, 이들은 비교적 장기적인 파업이나 불경기를 극복할만한 財政力을 갖추고 있고, 뿐만 아니라 특히 英國의 TUC의 경우는 勞動黨의 정치자금마저 후원할 수 있을 정도의 財力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¹⁶⁾ 한국노총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表 1은 1980年度の 한국노총의 財力관계를 보인 것이다. 表 1을 통하여 강조되어야 할 것은 당시 1백만 이상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노총의 1년간의 재정규모가 2억 6천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었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1980年度の 수입금 중 약 35%에 해당되는 9,100만원은 借入金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자율성이 그만큼 위축되고 있다는

13) 위의 신문(90년 3월 2일).

14) 한국노총(90년 2월 28일).

15) 예컨대 90년 2월 20일의 선거 후유증의 결과 李時雨 후보의 지지세력인 12개 산별노련(노총가맹 산별노련은 모두 20개)은 90년 7월 현재 연맹비납부를 거부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朝鮮日報(90년 7월 16일).

16) 金旺植, 앞의 논문, p.232.

〈표 1〉 韓國勞總의 수입지출현황(일반회계) (1979. 9. 1~1980. 8. 31)

| 수입 | | 지출 | |
|------|-------------|----------|-------------|
|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 맹비수입 | 162,740,576 | 맹비(국제맹비) | 1,052,181 |
| 잡수입 | 1,333,694 | 인건비 | 87,505,532 |
| 차입금 | 91,000,000 | 활동비 | 41,459,333 |
| | | 여비 | 4,197,400 |
| | | 유지비 | 14,067,084 |
| | | 설의부 | 31,256,273 |
| | | 사업비 | 45,176,439 |
| | | 행사비 | 11,737,475 |
| | | 차입금반제 | 15,000,000 |
| 計 | 255,074,270 | 計 | 255,074,270 |

資料 : 韓國勞總, 『1980년도 事業報告 부록 財政關係』 (서울 : 韓國勞總, 1980), p.7.

것을 의미한다. 또 支出部分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노총의 현상관리비에 充當되고 있고, 노총의 사업비는 노총 전체 경비의 1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노총에게 커다란 기대를 부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3. 全國勞動組合協議會의 結成

1987년 당시 民正黨代表인 盧泰愚氏에 의해 발표된 「6·29宣言」은 한국의 政治界뿐만 아니라 勞動界에도 대변력을 가져왔다. 대변력 증가 장 두드러진 것은 量的 팽창이다. 1987년 6월까지의 한국의 노조조직율은 14.7%, 단위노조의 수는 2,725개였었는데, 이것이 88년말에는 3,417개가 증가하여 6,142개가 되었고, 89년말에는 각각 25%와 1,230개가 더 증가하여 7,380개에 이르게 된 것이다.¹⁷⁾

87년 이후의 노동계의 대변화는 量的 변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17) 전국주간노동자신문(90년 1월 26일).

그것은 質的으로도 대변화를 가져 온 것이다. 크게 세가지 사실이 중요하다. 첫째는 노조의 구성양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87년 이전의 노조들은 생산직의 경우 주로 독점대재벌의 대공장에 국한되어 있었고 한국노총 중심의 조직체계를 보이고 있었는데, 87년 이후에 출현한 노조들은 대기업체들에 연관되어 있는 대다수의 하청 중소기업체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분야별로 특히 중요한 것은 자동차 철강 기계 가전제품들을 다루는 금속제품분야라는 것이다. 한편 비생산직인 사무직과 전문·기술직 부문의 소위 화이트칼라노조들은 87년 이전에는 주로 은행분야와 기타 금융권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87년 이후에는 교직 병원 언론 출판 연구소 대학교 등 그 분야가 다양해지고 규모도 작아지는 형태의 화이트칼라노조들로 양상이 바뀌었다는 것이다.¹⁸⁾ 87년 이후 출현한 생산직과 비생산직의 노조의 특성에 있어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노조들이 중소기업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되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87년 이전의 노조들을 옹호하고 있는 한국노총산하의 기업별노조들의 평균 조합규모는 483명인데, 87년 이후에 출현한 소위 「民主勞組」들의 평균조합 규모는 222명(생산직의 경우 314名 비생산직의 경우 64名)이라는 것이다.¹⁹⁾

두번째는 87년 이전에는 한국의 노조들이 대부분 기업별노조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87년 이후 출현한 노조들은 그 한계를 박차고 뛰어 나와 지역별 업종별로 마구 연대운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단위의 노조협의회의 경우 그 시초는 87년 12월 14일 馬山·昌原지역노동조합총연맹의 결성이다. 그 이후 이와 같은 地勞協(地域勞動組合協議會)은 전국의 주요 公團지역에서 결성되어, 89년 7월 현재 그 수는 무려 17개에 이르고, 그 산하의 노조는 모두 628개, 이 노조들에 加入되어 있는 노조원은 모두 245,79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한편 기업별의 단위노조라는 울타리를 뛰어 넘어 연대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18) 한국사회연구소, 『노동조합조직연구』(서울: 백산서당, 1989), p. 337.

19) 위의 책, p. 400.

한 業勞協(業種別勞動組合協議會)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주로 비생산직의 화이트칼라노조들간에 결성된 연대의 틀로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87년 11월 27일 제 2 금융권조합들이 기존의 金融勞聯을 탈피하여 결성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을 시작으로 하여, 또 88년 5월 정부와의 갖은 충돌 끝에 결성된 全敎組(全國敎聯職員勞動組合)를 포함하여, 89년 7월 현재 전국의 업노협은 모두 11개(병원, 사무금융, 연구전문, 출판, 언론, 대학, 교직원 등)이며, 그 산하의 조합은 모두 925개이며, 노조원은 모두 144,200명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89년 7월 현재 地勞協과 業勞協에 소속된 조합의 수는 1,552개이며, 그 산하의 노조원의 수는 343,990명으로²⁰⁾, 이것은 89년 6월 현재 집계된 한국의 전체 노조의 수 7,159개의 21.7%에 해당되며, 전체 노조원의 수 1,825,000명의 18.8%에 이른다.²¹⁾ 과거의 기업별노조라는 틀을 벗어나서 이와 같이 짧은 기간 중 다수의 地勞協 業勞協이 형성된 것은 한국노동운동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실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후술하겠거니와, 이들은 비교적 급진노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勢가 더 증대할 것이냐의 興否는 한국인의 관심사임에 틀림없는 일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路線上的 차이이다. 87년 이전의 노조들의 표방노선이 「勞使協調的 企業別組合主義」이라면 87년 이후의 소위 民主勞組들의 표방노선은 「戰鬪的 企業別組合主義」라는 것이다. 우선 노조의 이념은 전자의 경우 노사협조주의와 종업원중심주의라면 후자의 경우에는 계급연대주의이고, 노조조직의 목적은 전자의 경우 개별기업 내부의 종업원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에는 기업별노조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고, 노조조직 통합의 기준도 87년 이전의 노조의 경우에는 노동자사회 전체보다는 종업원사회 중심주의인데 87년 이후 출현한 노조의 경우에는 노동자사회 전체의 政治·社會的 가능성을 지향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직의 유지방

20) 위의 책, p. 399.

21) 전국주간노동자신문(90년 1월 26일).

식도 87년 이전에는 주로 국가권력과 자본가의 勞使協調요구에 順應하는 것이었다면 87년 이후에는 노조들이 국가권력과 자본에 對立하고 새로이 정치사회적으로 연대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한다.²²⁾

이상 87년 「6·29이후」 출현한 「민주노조」들간에 형성된 地勞協과 業勞協과 그들의 노선을 보았거니와, 이들 「민주노조」들의 다음 단계는 이들 조직의 全國化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전국노조단체인 全勞協(全國勞動組合協議會)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全勞協건설작업이 순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민주노조」들 또는 급진노조세력들이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노동자들에게 「제급의식」을 投入하고, 임금인상투쟁 노동악법개정투쟁 등에 있어서 「共鬪」가 형성되면 기존의 경제질서는 물론 사회 정치질서 전반에 大變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制度圈政治」가 社會民主主義를 수용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다면 급진노조세력들의 정치경제적 요구를 융통성있게 조절하여 수용할 수 있으려면 제도권정치는 당시 保守指向의인 4黨이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全勞協의 건설과정은 정부 및 資本家の 탄압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민주노조」들의 對應노력도 강화되어갔다.

87년 「6·29宣言」 이후 출현한 소위 「民主勞組」들 간에 형성된 지노협과 업노협은 89년 상반기에 와서 자기들의 투쟁목표를 크게 두가지로 잡았다. 첫째는 89년도의 임금인상투쟁을 「共鬪」로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수행을 위하여 88년 12월 22일 전북 전주에서 설치한 것이 「地域·業種別 勞動組合 全國會議」이다.²³⁾ 이 전국회의는 그 산하에 「全國勞動法改定 및 賃金引上鬪爭本部」를 두고 89년의 임투를 전국적 조직의 결성으로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²⁴⁾ 두번째는 89년 2월 23일 경기도 성남에서 개최된 제 3 차지노협·업노협전국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인데, 그

22) 한국사회연구소, 『노동조합조직연구』, p. 402.

23) 위의 책, p. 405.

24) 위의 책, p. 406.

것은 이 전국회의 산하에 임투본부와는 별도로 「全勞協準備小委員會」를 두기로 한 것이다.²⁵⁾ 민주노조들이 자기들의 전국노조단체를 설치하여 향후 각종의 노동운동에 있어서 共鬪를 制度化해 간다는 뜻이다. 그 이후 政治圈과 資本家側의 對應은 公權力을 발동시키는 것이었다. 89년 4월 4일 정부는 안기부, 보안사, 검찰, 경찰, 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公安合同搜查本部」를 發足시키고, 그 산하에 12개의 지역공안합수부를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勞使분규特別對策本部」를 발족시키고, 노동부의 국장급으로 6개의 지역별대책반과 8개의 업종별대책반을 구성하였다. 그리고는 정부는 89년 4월 26일 당시 平民, 民主, 共和黨의 야당 총재들도 노사문제에 있어서 단위사업장의 이해조정의 차원을 넘어 제 3자가 介入하여 정치투쟁화시키는 것은 反對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²⁶⁾ 그 이후 정부는 公權力을 發動시키기 시작하였다. 우선 89년 상반기 중에 현대중공업 럭키금성사 지하철 풍상금속 등에 公權力介入이 있었다. 한편 89년 6월 21~22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 7차 지역별·업종별 전국회의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全勞協結成을 「총체적 탄압」으로 임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 회의에서 전국투본상황실장이 밝힌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의지가 모아져야 한다. 제가 생각할 때 확고히 하고 말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한다. 정부는 총체적으로 탄압하고 있는데 우리는 분산적으로 대응하고 있기에 총체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일정은 7, 8, 9월 엄청나다고 본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전노협을 건설할 것인가라는 의지의 表明이 필요하다.」²⁷⁾

한편 지역·업종별노동조합전국회의는 89년 11월 23~24일 울산의 현대자동차 노조사무실에서 제 12차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보고자료에 의하면, 당시 정부와 자본가 그리고 한국노총 등은 전노협건설저지를 위하여 「탄압과 와해책동」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89년 10

25) 위와 같음.

26) 위와 같음.

27) 지역·업종별노동조합전국회의, 「제 7차전국회의회의록」, p. 16.

월 27일서부터 11월 17일 사이에 있었던 「탄압과 와해책동」이다. 우선 政府는 산업평화조기정착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생산현장의 폭력, 탈법쟁의를 엄단하기로 하고, 「국민임금위원회(후에 노사안정위원회로 바꿈)와 산업평화 범국민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업종별 노사교섭을 추진키로 하고, (주)동일 마창노련 부친, 안양, 인천,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노조대표들을 연행 구속하거나 파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자본가들은 경제 6단체장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전경협」(전국경제협의회)을 구성할 의사를 밝히고, 30대재벌의 임원과 80여개 업종별협회대표 등은 전경협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11월 5일 「노동법개정 및 경제민주화 촉구집기대회」를 갖기로 하고, 국민경제사회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는 것이다.²⁸⁾

이상과 같이 「전노협건설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탄압·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전국회의측은 鬭爭方針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① 우선 전노협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전노협건설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두고, 투쟁의 흐름을 파악한다.
- ② 노동법개정투쟁의 공식적 마무리는 12월 17일 전노협준비위 발족식 때로 하면서 노운탄투쟁을 전면에 배치한다. 노운탄투쟁의 내용은 외자철수반대투쟁 및 구속자석방투쟁 등 투쟁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중앙투쟁으로 배치하면서 대중적 전개는 전노협건설 일정에 신는다.
- ③ 경제 6단체장회의 등 전노협건설에 따른 정부, 자본가들의 공세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대응을 강화하여 노운탄투쟁과 함께 전노협건설 방해책동에 대한 저지선을 구축한다.
- ④ 이상을 종합하면, 정치, 경제적 대응 및 노운탄투쟁 등을 통하여 탄압저지선을 구축하고, 대중적으로는 전노협건설을 위한 강연회, 모금공연, 교육 및 결의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이를 전노협건설의 주요 일정으로 결집시켜 낸다.²⁹⁾

28) 지역·업종별노동조합전국회의, 제12차전국회의자료, pp. 1-2.

29) 위의 자료, pp. 2-3.

제12차지역·업종별전국회의는 이어서 전노협건설의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잡았다. 11월 25일~12월 16일에는 전노협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서 조합별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게 하여 일정공유 및 모금 등을 결의하게 하고, 전노협건설을 위한 대중적 분위기확산 대책으로 강연회 모금공연 토론회 등을 집중배치시키고 선봉대활동을 적극적으로 결합시키고, 12월 17일에는 전노협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12월 18일~(90년) 1월 21일에는 전노협 창립준비의 일환으로 89년 鬪爭成果를 정리하고 歸鄉指針을 마련하게 하고 營光90年新年會를 갖게 하고, 지역·업종별로 대의원대회 및 총회를 통해 전노협파견 대의원을 선출하게 하고, 강령·규약초안 검토회와 파견대의원 간담회 등을 갖게 하고 마지막으로 (90년) 1월 22일에는 옥내에서 전국대회를 열어 전노협 창립대회를 갖는다는 것이다.³⁰⁾

전노협창립대회는 예정대로 90년 1월 22일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전노협은 정부의 저지의사가 대단히 강한 상황에서 출범하였다는 것이다. 정부의 저지의사가 대단히 강하였다는 것은 다음 세가지 사실로 알 수 있다. 첫째, 정부는 전노협창립대회 이틀을 앞둔 1월 20일 청와대에서 盧泰愚大統領 주재로 「산업평화 조기정착과 임금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전노협 추진세력을 「階級鬪爭과 勞動解放理念아래 暴力革命路線을 추구하는 不法集團」으로 규정하면서 전노협창립대회를 원천봉쇄키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³¹⁾ 두번째는 전노협창립 당일인 1월 22일의 정부의 대책이다. 다음은 東亞日報의 보도내용이다.

경찰의 집회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재야단체회원들이 22일 오후 예정된 전노협창립대회를 강행키로 해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서울대에서 열릴 예정인 전노협창립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 원천봉쇄키로 하고 大學街와 公園周邊 都心地 등 서울 시내 곳곳에

30) 위의 자료, p.3.

31) 東亞日報(90년 1월 20일).

戰警 118개 중대, 1만 8천여명을 배치, 대회저지에 나섰다. 특히 대회장소인 서울대 주변에는 지난 20일 오전부터 전경 16개 중대, 2천4백여명을 집중배치,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등 외부인의 교내출입을 막고 있으며 연세대 고려대 주변 등에도 전경을 배치해 노동자들이 장소를 옮겨 대회를 강행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전노협건설준비위측은 「전노협건설은 시대적 당위」라고 주장, 「서울대가 봉쇄된다면 제2, 제3의 장소에서라도 창립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³²⁾

마지막 세번째는 1월 22일 당일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에서의 정부의 탄압대책이다. 정부는 전노협 창립대회가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에서 대회가 열리자 뒤늦게 경찰을 투입시켜 대회를 무산시키고자 시도했다. 경찰진입을 예상한 주최측은 예정보다 앞당긴 12시 40분부터 대회를 시작, 段炳浩위원장이 入場한 오후 1시경에는 「전경·백골단」 15개 중대가 성균관대에 진입해 대회장 밖에서 대회를 호위하던 노동자·학생선봉대를 해산시켰다는 것이다. 경찰투입 소식이 알려지자 段위원장은 대회장을 신속히 빠져나가고, 1시 25분경 만세삼창과 함께 대회가 폐회되자마자 「백골단」은 대회장에 亂入해 136명을 연행하고 다른 참석자들은 해산시켰다는 것이다.³³⁾

이로써 전노협은 88년 12월 22일 전주에서 열린 제 1 차 지역·업종별 노동조합전국회의에서 전노협결성을 추진키로 합의한 후 꼭 1년 1개월 만에 출범하게 된 것이다. 전노협측이 밝힌 바에 의하면, 전노협에는 14개의 지노협과 2개의 업종협(민주출판노조협의회와 시설관리노조협의회)이 가입해 있고, 가입노조수는 574개이고 조합원 총수는 19만여명으로 이는 한국의 전체노조수(89년 6월말 기준 7,159개)의 약 8%, 조합원총수(89년 6월말 기준 1백 82만 5천명)의 약 10%에 해당되는 규모이다.³⁴⁾

32) 東亞日報(90년 1월 22일).

33) 전국주간노동자신문(90년 1월 26일).

34) 위와 같음.

4. 全國勞動組合協議會의 未來

바로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90년 1월 22일 전노협결성 당시 전노협에 加入된 노조의 수는 한국의 전체노조수의 8% 정도에 불과하고 노조원의 수도 약 10% 정도로, 전노협이 한국의 노동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자본가측은 전노협의 결성과정과 그 이후의 일거수 일투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때로는 과잉반응을 보여왔다. 가장 단적인 예는 「6·29宣言」의 民主主義精神과는 걸맞지 않게 盧泰愚政權은 物理力을 동원하여 전노협을 不法團體化시키고 그것을 壓死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근거는 전노협이 내걸고 있는 급진노선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정부/자본가의 전노협에 대한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전노협은 소위 「民主勞組」들의 전국노조단체로서 그 勢를 증가시킬 것인가 아니면 위축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내리기로 한다.

다음은 90년 1월 22일 전노협이 결성될 당시의 「創立宣言文」에서 발췌한 것인데, 그것은 전노협의 급진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노동자는) 단위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 속에서 지노협과 업종협을 결성하였으며 마침내 지역과 업종을 뛰어넘어 전노협으로 결집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땅의 노동자가 진정으로 자신의 경제, 사회,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통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국조직을 갖게 되었음을 선언한다. 전노협의 건설로 한국노총으로 대표되는 노사협조주의와 어용적 비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을 극복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조직적 주체가 탄생하였음을 밝힌다.」³⁵⁾

이 발췌문을 통하여 읽을 수 있는 것은 만일 이 발췌문의 내용대로

35) 전노협의 「創立宣言文」과 「綱領」은 다음 文獻에 실려 있다. 韓國現代政治思想研究所, 自由實踐市民運動本部: 『전노협을 해부한다: 급진노동운동의 실체』(1990年), pp. 36-40.

全勞協이 수립되어 노동대중에게 뿌리를 내린다면, 한국의 노동운동은 과거의 노총중심의 단위사업장별 또는 기업별 勞使協調主義와 「어용적 비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에서 벗어나, 지역별 업종별 연대투쟁,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 수준에서의 연대투쟁이 가능한 그러한 양상으로 바뀐다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전노협이 創立宣言文은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도 담고 있다.

「우리는 광범한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의 조직과 의식을 발전시키는 기초 위에서, 노동자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경제사회구조의 개혁과 조국의 민주화, 자주화,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제민주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³⁶⁾

이 글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전노협은 앞으로 노동운동을 한국사회를 노동자 爲主의 사회로 개혁(소위 勞動解放이라고 함)해 가고, 아울러서 諸民主勢力(勞農敎貧學, 즉 노동자 농민 교사 빈민 지식인 등을 가리킴)과의 연대투쟁을 통하여 「민주화 자주화 평화통일」(최근 在野운동권의 政治口號)이라는 정치투쟁도 전개해 가겠다는 것이다.

전노협의 좀 더 구체적 행동지침은 「綱領」에 나와 있다. 모두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다음 3항목이 전노협의 급진성을 말해주고 있다.

I. 우리는 주44시간 노동으로 생활임금을 생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I. 우리는 직종, 남녀, 학력간 차별임금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생취한다.

I. 우리는 제민주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조국의 민주화, 자주화,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³⁷⁾

전노협의 급진성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전노협의 임금가이드라인에도 나타나 있다. 統計에 의하면, 87년 「6·29宣言」 이후 한국의 임금상승률

36) 위와 같음.

37) 위와 같음.

은 제조업생산성 증가율을 훨씬 앞서고 있다. 전자는 87년 11.6%, 88년 19.6%, 89년 상반기 23.8%인데 후자는 87년 11.0%, 88년 12.9%, 89년 상반기 7.1%에 불과하다.³⁸⁾ 그리하여 90년 임금상승률을 정부당국은 한자리 숫자 이내로 억제하기로 하였고, 노총은 산하노조들에게 17.3~20.5%를 시달하였는데, 전노협은 23.3%를 시달하였다는 것이다.³⁹⁾ 정부와 사용자 측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최근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기침체는 노조의 급진성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民主勞組陣營」은 좀더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거하여 이상의 사실을 공박하고 있다. 즉 1천만 노동자의 임금인상분(인상률을 20%로 가정시)은 7조 2천억원에 불과한데, 89년의 경우 土地價格 上昇에 따른 不勞所得은 무려 68조원에 이르고, 株價 上昇에 따른 不勞所得은 33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⁴⁰⁾ 전노협은 또 87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惡化一路에 있다는 것도 지적한다. 89년의 경우 30대재벌 계열업체들의 평균 인상률은 20.3%인데, 이것은 전체산업 인상률보다 2.64%가 더 높은 비율이라는 것이다.⁴¹⁾

전노협의 이상과 같은 급진성에 대하여 政府와 使用主 측은 전노협을 「左翼暴力勢力」으로 취급하고 각종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해 오고 있다. 첫째는 전노협 가입노조에 대한 업무조사권의 發動이다. 정부는 90년 2월 1일 이후 전노협가입노조 160개 노조에 대하여 업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조합비집행과 노조운영 등에 대해 업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조들의 태도는 원래 이 조사권발동에 不應하는 것이었으나, 정부는 노동조합법 제30조에 의거 不應하는 노조대표들을 구속·수배해 오고 있다. 전노협이 발행한 「90년 상반기 노동운동 탄압백서」에 의하면, 지난 5월말까지 구속된 노동자는 364명, 수배는 134名, 고소·

38) 위의 책자, p.6.

39) 朝鮮日報(90년 7월 16일).

40) 전국노동자협의회, 『1990 임금인상투쟁지침서』(서울:백산서당, 1990), p.14.

41) 위와 같음.

고발된 자는 224名에 달하고, 또 6월 중에는 구속자만이 400名에 이른다는 것이다. 구속된 자 중에는 전노협위원장 段炳浩氏도 포함되어 있다.⁴²⁾

두번째는 전노협의 운동이념을 비판하는 論理를 개발, 이를 弘報하기 위한 각종 책자를 대량으로 제작·배포하는 것이다. 예컨대 韓國現代政治思想研究所와 自由實踐市民運動本部가 90년 2월 12일 펴낸 『전노협을 해부한다』라는 책자에 의하면, 한국의 급진노동운동은 70년대의 都產(도시산업선교회로서 성경과 기독교교리를 左傾的 시각에서 해석하는 소위 해방신학 민중신학과를 가리킴)이 뿌린 씨앗에서 싹이 텄고,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운동권 학생 및 젊은층들에게 都產의 이념을 學習시키고 이들을 위장취업자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 「다락원」에서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⁴³⁾ 한편 90년 1월 20일 靑瓦臺會議 이후 결성된 「산업평화 특별대책반」이 펴낸 「急進勞動勢力的 實體와 對應論理」라는 책자에 의하면, 전노협은 운동의 궁극적 목표를 「勞動解放」에 두고 있으며, 노동해방이란 정부와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가 主人이 되는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이라는 것이다.⁴⁴⁾ 한편 노동부는 90년 2월 25일 『노동 3권의 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책자를 「노사관계 교육자료」로 펴냈는데 이 책자에 의하면, 「(헌법제33조 제 1항에 보장된) 노동 3권은 私有財產制를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⁴⁵⁾ 이상 전노협의 운동이념을 비판하는 논리들을 보았거니와, 이러한 노력은 확실히 非急進勞組勢力 및 다른 한국인들에게 전노협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끌고 갔을 것이다.

42) 주간전국노동자신문(1990년 1월 26일과 6월 15일).

43) 韓國現代政治思想研究所·自由實踐市民運動本部, 『전노협을 해부한다』 pp. 8-11.

44) 『急進勞動勢力的 實體와 對應論理』(이 자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註釋①을 참조할 것), p. 12.

45) 위의 자료, p. 6.

78 특집 : 한국 政治의 發展方向 연구

마지막 세번째는 노동자에 대한 회유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보도에 의하면, 90년도 상반기의 임투의 경우 住居安定問題가 크게 부각되었었다는 것이다.⁴⁶⁾ 예컨대 전국경제단체연합회가 139개 會員社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조의 88%가 주거안정요구를 내세웠고 이 가운데 80%가 주택수당이나 주택자금융자, 사원주택건설 등에 勞使가 합의하였다는 것이다.⁴⁷⁾ 그리고 최근의 신문보도가 우리의 관심을 끈다. 大宇그룹은 玉浦조선소 아파트단지에 150명의 주부사원이 근무할 수 있는 봉제工場을 8月 중에 完工한다는데,⁴⁸⁾ 노동자에 대한 회유책으로서는 理想的인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 전노협과 급진노조에 대한 정부·사용주 측의 물리적 탄압, 理論攻勢, 그리고 회유정책 등은 최근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기침체와 복합작용을 하여 90년 상반기의 노동운동을 小康狀態로 몰아왔다. 우선 임금협상관계를 보면 7월중순 현재 협상완료업체는 4,451개인데 평균 인당률은 8.8%라고 하니 정부가 의도했던 한자리 숫자를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작년의 18.7% 절반도 안되는 수치이다. 또 노사분규로 모두 262건 발생하였다는데, 이것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71건에 비해 78%나 감소한 것이다. 한편 전노협의 勢도 크게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전노협은 지난 1월 22일 結成 이후 주어진 不利한 조건 하에서 4월말 現代重工業파업시 또 5월 1일 메이데이 때 「파업투쟁」을 선언하여 165개의 노조로부터 전면파업을 얻어냈고, 127개 노조로부터는 부분파업을 얻어낸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에 따르면, 결성당시 456개 노조에 달했던 전노협가입노조는 현재까지 116개 노조가 이탈하여 나갔다는 것

46) 예컨대 지난 4월말 발생한 現代重工業勞組 파업시 일부노조대표들은 公權力介入에 항의, 地上 84m의 골리앗 크레인에 피신하여 그곳에서 항쟁을 벌였는데, 이 때 이들이 크레인에 내 건 플래카드에는 「투쟁:단체협상 승리하여 내집 마련 정취하자」라고 쓰여 있었다: 전국노동자협의회, 가자! 총파업의 불길은 물론 파업에서 해방으로!』(1990.5), 제1회 뒷장.

47) 朝鮮日報(90년 7월 16일).

48) 東亞日報(90년 7월 8일).

이다.⁴⁹⁾

그러면 앞으로 전노협이 정치생명은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가? 그것은 정부의 不法化措置로 끝내는 과거 해방직후의 全評과 같은 신세로 전락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위축된 상태로나마 정치생명을 유지해 갈 것인가? 전노협의 이와 같은 장래는 결국 정부·자본가와 전노협 양자간의 力動的 關係에 의해서 결정되리라 본다. 본고에서 보인 바와 같이 정부·자본가는 전노협을 不法團體視하고 物理力으로 탄압해 왔는데, 이 탄압이 전노협을 「完全한」 不法化까지 몰고 갈 정도의 것이냐 아니면 전노협의 「급진노선」을 「온건노선」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탄압정도에 불과한 것이냐에 관하여 현재 견해가 兩分되어 있다. 만일 前者라면 그것은 「國家組合主義」(state corporatism)와 유사하고, 後者라면 그것은 改良主義와 유사하다. 본고는 정부·자본가는 후자의 태도를 취하리라고 전망한다. 우선 현재의 6共政府는 다수의 執權者들이 5共人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최근에 와서 노조의 노골적인 탄압 등 民主主義에 逆行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6共政府는 근본적으로 5共 또는 4共 政府와는 다르다고 하겠다. 가장 단적인 예는 6共政府는 수립 그 자체가 「국민이 원하는 大統領直選制選舉」와 「국민이 원하는 國會議員小選舉區制에 의한 選舉」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최근의 3黨合黨으로 출현한 民自黨도 특정인들의 정권연장음모의 所産으로 매도되고도 있으나, 과거 民正黨 爲主의 정부시절에 비해 民自黨政府의 노선은 民主化 쪽으로 어느 정도 이행하였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전노협도 90년 1월 結成 당시에는 큰 威勢를 가지고 출범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정부의 物理的 탄압으로 그 勢가 날로 위축되어 왔다. 「벼랑 끝에 몰렸다」는 위기의식마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만일 국내에 혁신계정당이 있다면, 전노협은 그것에 救劑를 요청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런 정당들이 없다. 따라서 전노협이 그 동안 구제요청을 해 온 정당은 「保

49) 이상 여러가지 수치는 朝鮮日報(90년 7월 16일)에서 引用.

守政黨으로 분류되고 있는 平民黨이었고,⁵⁰⁾ 바로 그런 이유때문에 별 지원을 받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90년 7월말 현재 平民·民主·在野 3者統合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데, 이 統合이 성사되면 전노협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볼만 하다. 단 전노협도 과거의 「노동해방」, 「계급투쟁」, 「정치투쟁」 등의 극단주의에서 벗어나 노선을 온건화시켜야 대중에게 뿌리를 내리는 노조단체가 될 것이다.

5. 結 論

본고는 최근 한국정치의 民主化를 이익집단의 主要集團의 하나인 노조단체, 이 중에서도 全勞協을 가지고 보았다. 본고가 주장해 온 것은 이익집단이란 정치체계의 下位體系이기 때문에 정치체계 전체가 성격변형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결국 이익집단인 노조단체에게도 성격변형을 유발하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構造機能主義理論家들의 주장이다. 본고의 집필이 끝나는 90년 7월말 현재 한국의 6共政治는 非民主的 요인들을 다분히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의 4共 5共政治와 비해서 民主化의 방향으로 進一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物理的 탄압에도 불구하고 全勞協은 自生力을 가지고 살아남을 것이며, 만일 政權이 현재의 民自黨에서 최근 통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統合新野黨으로 이행한다면 전노협의 정치적 기반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다.

50) 예컨대 주간전국노동자신문(90년 3월 9일)에 의하면, 정부의 段炳浩전노협 위원장 등 잇따른 구속을 호소하기 위하여 전노협중앙위원회문단 및 지도 위원 등 60여명은 3월 3~5일 여의도의 平民黨에서 「단위원장 등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노협이 5월 14일 발행한 「狀況室資料 p.70」(油引物)에 의하면, 서울한국야쿠르트 평택공장 파업인원 120名은 4월 19일~5월 13일 파업 중 5월 7일부터 平民黨에서 농성 중이라고 한다.